

#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많은 일년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은 일년을 마감하는 느낌이 들어 허전하기만 하다.

UR협상을 통해 수입개방이 결정되면서 부터 농업 각 분야에 찬바람이 일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안도할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 낙농육우산업은 그런대로 무난하게 넘긴 것 같다.

예년에 없던 무더위와 가뭄때문에 젖소등 가축의 피해가 엄청났고, 그 여파로 우유부족현상이 나타난 기현상 역시 큰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소값의 안정, 우유의 부족에서 오는 일시적 안정성 등 대체로 무난히 넘긴 한 해였다고 보여진다.

다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년이면 개방으로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 낙농업계를 몰아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지만 다소 부족한 원유 수급사정 때문에 낙농가에 직접적인 위기 현상은 실감되지 못한 한해였다.

문민정부에서도 여전한 농민시위

UR협상을 통한 농산물의 완전 수입개방은 이나라 농업사에 있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농업의 존립여부, 농촌의 보존여부, 그리고 농민의 몰락여부가 주목되는 일들이 결정된 해로서 기록될 것이다. 개방화 세계화속에서 고립될 수 없기 때문에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일반론 정도로는 이해될 수 없는 국가적 흥망의 문제가 결정된 한 해였다.

UR협상결과로 수천년 민족사를 이어오면서 나라의 근본을 형성하고 국가유지의 터전이었던 농업이 자칫 하면 존재를 감출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을 맞은 것이다. 수출위주의 상공업 우선정책에 가려져 농업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으로 뒤쳐져 있다가 이제는 농산물 완전개방정책으로 설 땅을 잃게 될 위기인 것이다.

물론 지난해 12월 15일 가트(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이 결정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

난해 12월의 협상은 UR협정문대로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 협상되었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가트에 최종 개방 이행계획서(C.S.)제출을 앞두고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C.S해당 품목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거나 협정문에 적시한 관세상당치(T.E) 또는 국영무역과 부과금, 유예기간, 최소시장 접근등을 UR협정문대로 구체적으로 적어내어 이해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해 오면 재협상에 응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수십차에 걸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간의 연대회의, 정부에의 건의, 정부와 국회로의 방문 활동등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2월 1일 대학로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9일 UR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역 앞에서의 농민시위는 문민정부 들어 두번째 대회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였다. 5만여 농민이 서울에 집결하여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의 마찰이 빚어졌고 농민과 경찰의 부상이 속출하여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농민시위의 양상이 변화되었다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농민의 실망과 분노는 커 있었고 UR 협상에 대한 지적의 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1일 GATT에 제출한 C.S에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낙농제품의 수입개방은 선진국인 일본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 심각하다. 2월 19일 일본정부의 C.S제출 내용을 협회에서 직접 입수하여 정부 각 계요로에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게 지난해 12월의 협상대로 개방된다면 낙농의 존립이 어렵다고 강조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R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속에는 대다수 쇠고기 및 낙농문제가 중심과제이고 보면 그 결과 역시 그만큼 심각하다는 내용과 일치될 수 있다. 일본은 낙농제품의 수입시 관세에 더하여 부과금(Mark-up)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억제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우리는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민시위를 계기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개편, 민자당의 당직개편이 반복되었지만 UR 문제에



관한 대안은 별로 변화된 것이 없었다. 틈만 나면 국회에서의 UR 비준 조기처리문제만 정부여당에서 거론되어 왔다.

UR협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미국은 WTO 설립협정문과 UR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늦추면서 품목별 개방조건에 대한 추가협상을 가해오고 있다. 또 협상으로 덕을 본 나라들은 각종 법령개정과 농업대책을 서두르면서 국회비준을 연기하고 있는터에 우리가 앞장서 비준을 서두른다면 국력의 열세를 자처하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마치 UR비준연기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의미하는 양 왜곡 홍보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등의 대응은 분명 잘못된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데서 문민정부의 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국익우선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우선 2만여 페이지가 넘는 UR관계 협정문과 각국의 C.S를 제대로 번역하여 이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UR이 허용하는 농업과 관련된 각국의 지원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하고, 미국등 선진국의 UR비준을 지켜본 뒤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UR비준전 국내 농업대책을 완비하라는 전국 농민대회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로 개최 되었음을 다시한번 주목해야 한다.

## 미국등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지난해 12월의 UR협상으로 낙농육우산업 부분의 수입개방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다. 지난 1월 19일 부터 21일까지 있는 생우관련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2001년 부터 생우수입 개방을 약속하였다. 쇠고기를 키타제를 하여 그것도 관세상당치 개방조건도 얻지 못한채 SBS 물량을 늘리면서, 적정관세를 물면 수입되도록 협상한 후 생우까지 개방약속을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종우명목으로 생축이 내년부터 640두를 시작으로 10년간의 수입개방키타를 우리 스스로 제출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져 앞친데 뒷친적이 되었다. 전적으로 종우수입문제를 언급조차 한적이 없다고 분노하는 농민들에게 농립수산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인양 변명하고 있다.

국내 등록젖소 두수를 기본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 수입물량과 일정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UR기본원칙인 양 설명하고 있다. 물론 종축명목으로 우수한 고능력젖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일부 뜻있는 낙농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는 단계까지는 전적으로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 궁색한 입장으로 낙농가와 마찰을 빚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많은 면에서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결국 내년도부터 수입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입키타량의 종우는 전량 정부기관 즉 축산시험장이나 종축원 등의 종축관리용으로 충당하고 농가 분양은 억제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터이나 아직 언급이 없다.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가 주로 호주나 미국산이 주종이 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문을 여는 압력국이었지만 어부지리로 호주산 쇠고기가 판을 치자 미국소는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주선하여 우리에게 주문해 오고 있다. 이미 SBS 물량확대는 제도적으로 수입물량에서 일정 비율로 정해 놓은 데다가 국내 쇠고기 유통문제에 까지 관여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국내 유통단계에 직접 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각종행사나 과업에 신경써 왔다. 국내 정육업자나 호텔 요리사 등을 초청하여 대규모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거나 국내 수입육과 관련업체 대표들을 미국 현지시찰을 시킨다거나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미국의 본격적인 활동에 고무되어 호주나 캐나다 등도 뒤질새라 국내에 지부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자국산 쇠고기 판촉 활동에 돌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수입 쇠고기의 소비국으로서 좋은 시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 쇠고기 유통기간을 문제삼아 유통기간 연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현재 쇠고기 유통기간을 14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100일로 연장하라고 옥박지르면서 미통상법 301조 발동으로 우리의 시장조사를 하겠노라 협박하는 단계에 와 있다. 미국 때문에 우리시장 조차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것이 세계화, 개방화이라면 사전에 국내 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미국이 요구하거나 주장한 사실에 대해 시간의 문제만 따를 뿐 거의다 성사되었던 사례로 볼 때 국내 유통문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뿐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미국이 요구하거나 주장한 사실에 대해 시간의 문제만 따를 뿐 거의다 성사되었던 사례로 볼 때 국내 유통문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뿐이다.

냉장육 유통을 통해 신선육 공급을 국민에게 서비

미국은 국내 쇠고기 유통기간을 문제삼아 유통기간 연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현재 쇠고기 유통기간을 14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100일로 연장하라고 옥박지르면서 미통상법 301조 발동으로 우리의 시장조사를 하겠노라 협박하는 단계에 와 있다. 미국 때문에 우리시장 조차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것이 세계화, 개방화이라면 사전에 국내 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미국이 요구하거나 주장한 사실에 대해 시간의 문제만 따를 뿐 거의다 성사되었던 사례로 볼 때 국내 유통문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뿐이다.



스한다는 보다 획기적인 국내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 논쟁만 하다가는 미국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낙농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멸균유 유통기간이 6주에서 7주로 연장되었지만, 유제품개방에 맞추어 눈독을 들이는 나라들이 저마다 국내 우유시장에 군침을 삼키고 있다.

그중 맨먼저 호주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호주 내에서의 멸균유 유통기간은 8개월인데 비해 한국의 7주기간은 너무 짧다는 문제를 우리 정부에 공식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유가공허가권이 없어 보사부가 다루고 있고, 보사부는 이론적으로 호주를 설득할 수 없는 한 호주 주장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궁색한 입장이다. 국내 유업체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걱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다. 멸균유 유통기간의 연장에 있어 가장 큰 우려는 환원유 등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 범람이다. 그래도 시유만은 개방해도 경쟁력이 있다며 당장에 시유수입만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여 문을 열었지만 막상 멸균유 유통이 확대되고 환원유 문제가 터져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에 있어 또 하나 충격을 준 사건은 호주산 수입쇠고기의 농약검출이다. �고기 수입이 확대되면서 제대로 검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호주산 �고기 농약검출을 우리 정부는 문제시 않았는데 오히려 호주정부에서 결과를 알려 왔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개방을 강요하는 외국의 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방비로 이제 못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나아가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검역수준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본다. 검역기관의 일원적 통폐합, 검역기준의 강화, 그리고 선진검역시설의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제 농민도 반성해야 한다.

수입개방이 거론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의 하나가 국내 낙농육우 농가의 정신자세이다. 수입확대를 걱정하며 생업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과제라면 단합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농가 스스로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간 이견이 노골화되고 분열조짐이 있다는 것은 적전교란이 아닐 수 없다.

수입개방이 되는데도 정부는 뭐하고 협회는 뭐했느냐며 소리치는 농가는 흔히 볼 수 있어도 우리 모두 단합하여 대응하자며 적극성 있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낙농육우 농가를 대변하여 줄 단체를 찾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있는 단체에 모일줄은 모른다. 그것이 농민의 최대 약점이자 풀어야 할 최선의 과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특히 한우 사육농가의 경우가 더하다.

수입이 본격화되면 국내 한우는 가능성이 없다며 대책을 소리 높이던 농가들이 많았다. 그 중 일부는 살길을 찾자며 우선 한우직판장을 만들기로 하고 쇠고기 판매가 제법 잘되자 농가대변하는 협회는 이제 존재가치가 없고 판매가 잘되도록 고급육 생산에 치중하여 지도하는 단체만 있으면 된다고 농민단체의 불필요성을 되레 역설하고 있다.

미국등 개방을 강요하는 나라 농민들은 조금이나마

더 수출하여 자기 권익을 찾겠노라 별로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에 온갖 압력을 가하도록 갖가지 로비와 자금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비하면 대조가 될 수 밖에 없다. 강력한 국가뒤에는 강력한 농민의 힘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겉허히 반성하고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낙농의 제도개선과 법적인 안정장치를 부르짖으면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소모전에 휩싸이면서도 낙농진흥법 개정은 이시간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대다수 낙농가들이 낙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나 일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서는 논의만 진행중이다. 국회의원들을 원망하는 농가도 많이 있으나 아쉬울 게 없는 국회의원에게 소리친들 반대하는 낙농가 때문이라고 일축하면 할말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낙진법 개정의 본래 취지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 일부 내용에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동서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남북도 대화로 풀자는 판에 도대체 낙농가간에 무슨 그리 큰 이해가 얽혀있기에 반대와 찬성이 극으로 치닫는지 답답하다. 외부에서 볼 때 농민이 단합 못하면서 누구를 탓하느냐는 핀잔이 앞서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낙농지도자들의 반성이 없이는, 이 문제 하나로도 농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산적한 과제를 풀기 어렵다는 충분한 반증자료가 될 것이다. 우유개방에 따라 선진 낙농국의 값싸고 질 좋은 유제품이 밀려올 경우 그래도 우리가 지키려면 우유 소비홍보에 낙농가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는 이땅에서 생산한 신선한 우유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선전은 어차피 우리 낙농가의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값싼 분유를 수입해와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업체가 낙농가를 대신하여 시유를 선전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자사제품 선전에 치중하여 유업체가 거액 투자한다면 우리 낙농가들이 출선하여 시유 선전을 하고, 낙농가들의 홍보활동에 외면할 수 없도록 유업체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큰 힘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정부 또한 낙농가의 우유홍보에 힘을 모아 줄 것이고 큰 돈이 모아져 최소한 시유만은 우리가 선점한 이시장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유마저 무너진다면 낙농은 끝장일 수 밖에 없다.

그러자면 우선 자조금 관련법의 개정등 법적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낙농의 경우 낙진법 개정엔 문제가 걸려 있는 셈이다.

정부나 국회를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낙농육우농가의 힘이 있어야 하고, 낙농육우농가의 힘은 단결하고 뭉치는데서 발휘되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배합사료가격 인상저지이다. 배합사료업체들은 원료구입 가격인상등을 이유로 10월부터 배합사료가격 인상을 약 5% 수준에서 시도하려 하였으나 우리 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의 반대로 불발로 끝났다. 이해가 직접 와 닿는 배합사료가격등에 대해 갖는 민감성은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노력으로 단결하고 정책건의나 외부활동에 매진한다면 별로 어려움없이 대처하리라 본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관심이 있고, 직접적인 이해보다는 간접적인 문제, 가령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건의하는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돌리는 일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

정부나 국회를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낙농육우농가의 힘이 있어야 하고, 낙농육우농가의 힘은 단결하고 뭉치는데서 발휘되는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관심이 있고, 직접적인 이해보다는 간접적인 문제, 가령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건의하는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돌리는 일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낙농육우농가는 목장내부에서 땀흘려 경영에 매진한다면 농가를 대변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힘을 모으는 일에도 경영 못지 않은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소값이 안정되고 우유가 여름의 무더위와 가뭄으로 부족하여 그러나 안정된 분위기가 형성되자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양 믿고 단합에 외면한다면 회를 자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낙농육우농가는 목장내부에서 맘홀려 경영에 매진한다면 농가를 대변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힘을 모으는 일에도 경영 못지 않은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소값이 안정되고 우유가 여름의 무더위와 가뭄으로 부족하여 그나마 안정된 분위기가 형성되자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양 믿고 단합에 외면한다면 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이루어진 것은 없고 소리는 요란하고

김영삼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사항중 축산농민의 이해에 직접 와 닿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료 및 기자재의 부가세영세를 적용건 이었다. 대통령 취임이후 해가 바뀌어도 반응이 없자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건의하고 나서자 기자재의 영세를 적용은 약속하였으나 사료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의 약속도 안 지켜지니 정부의 어떤 농정공약도 믿지 않으려는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마치 쌀 수입 개방 절대 불가에서 개방불가피 쪽으로 선회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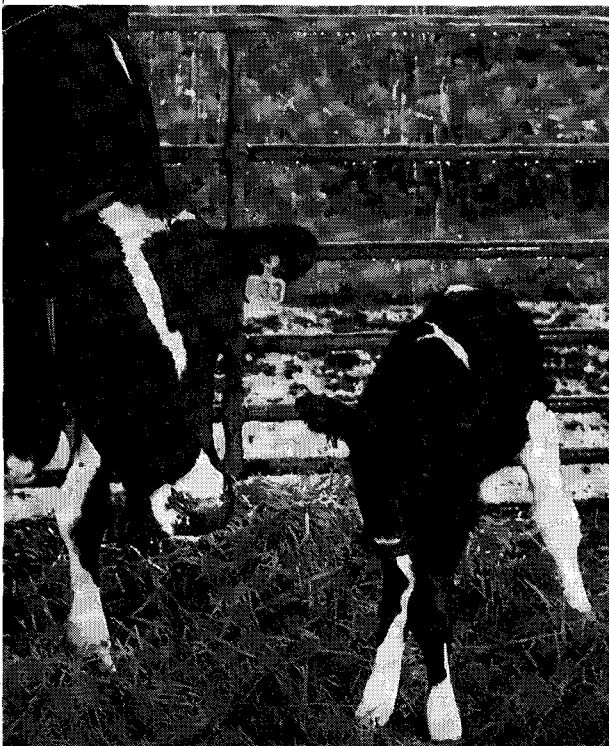
과 마찬가지로 급할때는 약속하고, 농민들에게 기대감을 제공하고 나중에 가면 적당히 넘기려는 정부의 부도덕성을 집중 거론하면서 농민들의 정부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축산단체에서 각종 회의나 집회시 으레 단골메뉴로 등장한 사료의 부가세영세를 적용은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과 반비례하여 정부불신의 자료를 하나 더 늘려 주었다.

계속되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집중거론되면서 축산 분노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자원화하여 퇴비로 활용해야 하고 단속이전에 현실적인 설계도 마련으로 농기들이 제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올해에도 목놓혀 외쳐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수차에 걸친 건의 활동이 이어지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자 축산농가와 일부 뜻 있는 분들이 나서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보전을 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노처리 대책 없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을 분명하다. 정부의 낙농육우농가 전업화 육성지침에 맞도록 하지는 취지에서 현재 부업규모의 농가수준인 젖소 성우 20두, 한우 30두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젖소 40두, 한우 50두로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응이 없다. 전업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그러자면 전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규모로 소득세 면세 규모확대는 필요하지만 행정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농림수산부의 노력의 결실이 있는 사안이 축사 신고면적의 확대 조치이다. 60평 규모 미만의 경우에만 신고제로 60평 규모 이상은 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을 120평 규모로 확대하였다. 농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농림수산부의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부와의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처럼 시원히 풀려간다면 낙농육우산업의 체문제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유수급이 문제시 될때 마다 거론된 사안이 유가 공허가권의 농림수산부 이관문제였다. 올해 역시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행정쇄신 위원회등 각 요로에 건의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도 보사부에서 이관되지 않고 있다.

한우협동조합 결성문제 역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조합결성이 추진되도록 결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우가 사라질 위기라며 떠들면서도 한우조합 결성에는 왜그리 문제가 많고 반대 이유가 많은지 한심하다. 한우농민을 위하는 일인지 기존 축협 존립을 위해 한우조합 결성을 포기해야 하는지 근본 과제를 다시한번 새겨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공약사항 중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발전위원회 설치와 농민들의 큰 관심사였다. 2월부터 6월까지 농밭위가 운영되는 동안 낙농육우산업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건의와 자료채출 등 활동을 하였으나 그 결과의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많은 농민단체들이 농밭위 결정사항조차 실행되지 않고 농정개혁은 후퇴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 기대반 실망반이다. 농밭위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행정부에서의 반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가축사양에 있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과 사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되는 요구의 소리가 있었고 올해 역시 사료관리법 개정을 부르짖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농가들이 요구하는 요지는 TMR 사료의 보편적인 이용을 위해 법적 조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사료공장 설립의 신고제(등록제)이다. 쇠고기, 유제품등 농산물의 완전 개방은 용인하면서도 국내에서 농민들이 구입해 쓰는 사료제도의 제한적 조치를 시정해 달라는 주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낙농가들에게 봄처럼 조성되고 있는 TMR 배합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낙농가 스스로 배합소를 만들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TMR배합소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제도적으로 돕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솔선 할 수 없다면 농민이 주도하여 유리한 제도로 개선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지도하는 편의제공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 그

런 뜻에서 TMR 배합소들의 모임을 형성하고 있음은 작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수입식품과 국산식품과의 구별이 애매하고 수입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속이는 행위가 다반사로 되면서 절실했던 것이 수입식품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로서 제시되었다. 농림수산부는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유가공품은 우유류, 저지방유류등 3개품목으로 되어 있어 다소나마 원료구분을 하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다행한 일이다.

개방을 앞두고 많은 구호성 대책마련을 요란히 나열하였지만 실제로 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크게 관철된 것이 없다는 농가의 소리가 높다.

### 함께 단합해야 산다.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은 많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애쓴 분야별 많은 분들의 노고는 숨어 있다고 본다. 농가에서, 업체에서, 단체에서, 언론에서, 연구실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나라 낙농육우산업과 농축산업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뭉치고 힘을 합치는 통합적기능 발휘가 아직도 미약하다는 데는 동감할 줄 안다. 똑 같은 목표의 식으로 매진하면서도 힘을 모으지 못한다면 불행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주체는 우리 농민이다. 농민이 주체가 되어 낙농육우산업을 땀흘려 가꿀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미력하나마 협회가 때로는 주체로서 때로는 농민을 돕는 역할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비판은 쉬워도 실행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실적 제약을 딛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 먼저 농민이 있어야 단체도 업체도, 연구기관도, 정부도 존재가치가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농민의 의식도 성숙하여 스스로 살길을 위해 뭉치고 모이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94년을 뒤돌아 보았으면 하고 소망해 본다.